

## Asan Plenum 2013: “새로운 무질서” (New World Disorder)

### 패널 개요

4 월 30 일 (화요일)	10:15-11:30	P1-RR	새로운 무질서
	12:30-13:45	S1-RR	미국, 아시아로의 회귀
		S1-GB1	세계 경제위기와 아시아 자본주의
		S1-GB3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
	14:00-15:15	S2-RR	사이버 안보
		S2-GB1	동북아시아의 핵 문제
		S2-GB3	북한의 인간안보
	15:30-16:45	S3-RR	한미 동맹의 주요 도전과 과제
		S3-GB1	안보 위기와 무역 분쟁
		S3-GB3	시리아 사태와 국제사회의 역할
17:00-18:15	P2-RR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5 월 1 일 (수요일)	09:00-10:15	S4-RR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 문제
		S4-GB1	세계 경제위기와 정당체제의 미래
		S4-GB3	G-20 의 무질서 대응
	10:30-11:45	P3-RR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개혁
	14:00-15:15	S5-RR	동아시아의 불안 요소
		S5-GB1	영유권 분쟁과 해양안보
		S5-GB3	중국과 아세안 (ASEAN)
	15:30-16:45	S6-RR	난민 사태와 주변국가의 역할
		S6-GB1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동질성
		S6-GB3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리더십 부재
17:00-18:15	P4-RR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 새로운 무질서

세션: 플래너리 세션 I/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4월 30일, 10:15-11:30

사회: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패널: 지아칭궈, 베이징대학교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타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

### 패널 개요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과 신흥국들이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가 끝나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의 미래가 이렇듯 불투명한 때에 확실한 세계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진정한 리더십과 통찰력있는 비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질문]

1.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질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2. 앞으로 세계는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무극체제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3. 1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무엇일까?

## 미국, 아시아로의 회귀

세션: 세션 1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4월 30일 / 12:30-13:45

사회: 크리스토퍼 넬슨, 사무엘스국제컨설팅  
패널: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정재호, 서울대학교  
제임스 린지, 미국외교협회  
월터 로먼, 해리티지재단  
선당리, 푸단대학교

### 패널 개요

2011년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심축을 광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1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한 후, 소위 아시아로 “중심축(pivot)”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중심축”에 내포된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발표한 지 1여 년이 지났으나, “중심축” 이동을 위한 군사력의 균형 조정이나 무역 증진 면에서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심축” 구상이 과연 이 지역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질문]

1. “중심축”이라 함은 미국의 대외 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홍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였는가?
2. 미국은 어떻게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가?
3.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심축” 이동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미국의 역량이 축소된 상황에서 비용 분담과 동맹 관계 재협상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 세계 경제위기와 아시아 자본주의

세션: 세션 1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2:30-13:45

사회: 조셉 스텐버그, 월스트리트저널아시아  
패널: 모종린,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제니퍼 오, 이화여자대학교  
나탈리아 소바호, 인도네시아대학교  
양쉐동, 중국비교경제학및정치센터

### 패널 개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적”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식 자본주의, 인도 및 브라질의 민주적 개발 중심 자본주의, 독일, 프랑스 및 북구 식의 유럽 자본주의, 싱가포르의 기업중심적 소규모시장 자본주의 등 다양한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이런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장점을 연구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정부의 개혁을 진행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는 아시아 정부들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정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아시아 국가들은 -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 경제 개혁을 단행할까, 아니면 반(反)경쟁주의와 포퓰리즘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자유 무역의 혜택을 저해할 것인가?

### [질문]

1.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를 비교할 때 동아시아 정부들이 대처 방식에 어떻게 다른가?
2. 2008년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서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시장주의를 지지하던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3. 글로벌 금융 위기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거의 개발국가 모델, 자유시장 경제 모델, 아니면 대안적 자본주의 중 어느 것이 힘을 얻고 있는가?

##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

세션: 세션 1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2:30-13:45

사회: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패널: 안덕근, 서울대학교

나카지마 도모요시, 환동해권경제연구소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대학교

자오환성, 아메리칸대학교

### 패널 개요

동아시아 경제의 협력과 통합은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교역량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동아시아 지역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요원하다. 일부에서는 역내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진정한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역사적 갈등, 영유권 분쟁, 문화적 이질성이 결합되어 통합의 심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협력체제(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두 개의 평행적 움직임이다. 만약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과 얽히게 되면 동아시아 경제 연합(East Asian Economic Union)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이다.

### [질문]

1. 경제 통합은 아시아 국가 및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는가? 과연 경제 통합이 이 지역에 바람직한 것인가?
2.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과 또는 소지역 단위의 통합은 병행 추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는 목적상 상호 배척적인가?
3. EAFTA, CEPEA, TPP, RCEP, ASEAN 통합, 한중일 FTA 등 협력 체제의 미래는 각각 어떻게 전망되는가?

## 사이버 안보

세션: 세션 2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아니큰 톱-링가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동지부

패널: 리처드 폴켄라스, 미국외교협회

닐 로빈슨,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 패널 개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리는 21C에는 분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사이버 공격은 인터넷 강국인 한국과 인터넷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든 비대칭적 공격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이버 안보는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는 오늘날의 복잡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 내지 사이버 전투 부대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도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터넷 첩보 행위 또는 전쟁 행위에 위협하리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자칫하면 인터넷상에서 공간의 상호 확증 파괴(MAD)가 실현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처럼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각축의 장이자 전장이 될 수 있다.

### [질문]

1.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 해킹에 대한 대응에 적용되는 규정(rule)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2. 사이버 공격은 발전소, 철도, 전력망 등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의 주체였다면 이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3. 기술 발전으로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가?

## 동북아시아의 핵 문제

세션: 세션 2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토비 달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패널: 전봉근, 국립외교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리처드 웨이츠, 허드슨연구소

### 패널 개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일념에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 클럽(nuclear club)의 일원이 되면,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좀더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기로에 서있다.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역내 핵확산 움직임이라는 두 개의 길의 교차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 패널은 동북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턱(threshold)과 장애물(hurdles)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아시아의 방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를 출발점으로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대적 상황까지 갈 것인가?

### [질문]

1. 핵무장을 피하는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2. 현재의 핵비확산체제를 감안했을 때, 동북아지역에서 핵 도미노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3.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북한의 인간안보

세션: 세션 2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에이브러햄 김, 한미경제연구소

패널 :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레이린 캠벨,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 패널 개요

이제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위와 함께 배고픔, 빈곤, 전염병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가시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정권이 붕괴하면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더 심각한 인권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인권 가해자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 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전염병, 경제적 궁핍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도 역시 북한 정부다.

### [질문]

1. 북한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ex. 강제수용소, 기아, 보건체계의 붕괴 등)가 행해지고 있는가?
2.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3. 다른 국가들은 인간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북한과 비교 가능한 국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 한미 동맹의 주요 도전과 과제

세션: 세션 3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4월 30일 / 15:30-16:45

사회: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패널: 더그 밴도우, 케이트연구소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선당리, 푸단대학교

### 패널 개요

2013 년은 한미 동맹 체결 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 양국은 이해관계나 정책 우선과제 등 많은 것에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이양 문제, 2014 년 3 월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연장 문제, 한미 FTA 의 이행 문제 등의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동맹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국 안보체제의 양축인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기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킬 황금 같은 기회인가?

### [질문]

1. 한국 국민은 한미 동맹에 대하여 세대간 의견이 대립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2. 미국에게 한일관계의 회복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필수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바람직한가?
3. 중국은 지금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할까?

## 안보 위기와 무역 분쟁

세션: 세션 3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5:30-16:45

사회: 존 스웬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학교

패널: 켄트 컬더, 존스홉킨스대학교

T.J. 펨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이고르 톰버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 패널 개요

2010년 말, 중국은 센카쿠/다오위 군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희토류란 필수적인 첨단 산업 원자재로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수조치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것이 21세기에 있을 국제 분쟁의 양상인가? 이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전쟁보다 무역 분쟁이나 경제적 사보타주(sabotage)가 훨씬 더 큰 위력을 갖게 된 것인가? 이 같은 무역의 정치 수단화는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 질서가 “반목적 번영(antagonistic prosperity)”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질문]

1. 정치적 안보적 긴장 사태의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무역 사보타주 (trade sabotage)나 금수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2.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아시아는 전통적 “정경 분리” 원칙에서 반향 전환을 했는가?
3. 공동 투자 사업이나 지역 경제 협력으로 이런 반목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

## 시리아 사태와 국제사회의 역할

세션: 세션 3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4월 30일 / 15:30-16:45

사회: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패널: 칼리드 압둘라 알부 아인나인, 동부및걸프군사분석연구원

카이한 바제가, 중동전략연구소, 테헤란지부

존 칼리브레제, 중동연구소

시난 월겐, 경제-외교정책연구센터

### 패널 개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내전의 지역적 확산에 대한 초기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주변국가들도 내전에 말려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분파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였다.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으나 아사드는 끝까지 정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비난의 목소리와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드 정부는 핵심 동맹국들을 등에 업고 잔악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아사드가 빠른 시일 내에 실권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사 된다 해도 전쟁이 끝난 시리아는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중동 전역에 심각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시리아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개입 결정 기준과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시리아 사태는 중동지역의 미래 역학구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질문]

1. 국제사회는 왜 아직까지 시리아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2. 무엇이 외부 세력들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게 만들까?
3. 아사드의 축출은 중동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세션: 플레너리 세션 II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4월 30일 / 17:00-18:15

사회: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즈

패널: 최강, 국립외교원

에드윈 풀머, 해리티지재단

판전창, 중국개혁개방논단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쉬퍼, 미국상원외교위원회

### 패널 개요

세계의 강국과 정치 구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수 세기 동안 그랬듯이 갈등과 지배의 관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국과 대국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동아시아에는 유럽 같은 포괄적 정치적 체제 또는 전략적인 체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자 동맹 관계가 여전히 역내에서 국제 관계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최강국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세계 2 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하여 세워진 취약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질적 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지역에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식의 국제 모델이 계속 유효할까, 아니면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로 대체될까?

### [질문]

1.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와 동아시아 지역 체제가 병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가?
2. 과거 동아시아의 지역적 질서 모델을 현재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수직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성립될까? 지역의 이익과 각국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3. 동아시아의 통합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외부 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무엇인가?

##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 문제

세션: 세션 4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5월 1일 / 09:00-10:15

사회: 크리스토퍼 넬슨, 사무엘스국제컨설팅

패널: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마크 매닝, 미국의회조사국

판전창, 중국개혁개방논단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 패널 개요

끊임 없는 정복, 식민 지배 및 세력권의 이동으로 점철된 역사가 동아시아의 지역 화해(rapprochement)와 협력의 걸림돌이다. 독도, 댜오위/ /센카쿠 군도, 난샤오/스프래틀리 군도, 남중국해 분쟁 등은 모두 역사적 영유권 때문에 야기된 분쟁이다. 이런 일련의 분쟁은 무력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격렬하고 감정적인 시위 일본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극우민족주의에서 보듯이 지역 전반에 걸쳐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번영하는 아시아가 반드시 평화로운 아시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시아 시대”에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 [질문]

1. 동아시아에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과거사 문제가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2. 안보 문제(ex. 북한)나 경제적 이익(ex. 무역 협상) 등 시급한 사안을 위해 각국이 민족 감정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가능할까?
3.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에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세계 경제위기와 정당체제의 미래

세션: 세션 4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5월 1일 / 09:00-10:15

사회: 데이빗 브래디,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패널: 크리스토프 크롬베즈, 스탠포드대학교

하리 한, 웰즐리대학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고노 마사루, 와세다대학교

### 패널 개요

일반적으로 정당 제도는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체제 역시 그것을 받쳐주는 상황이 변하면 흔들릴 수 있다. 정당에게 정치적 힘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유권자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로 생겨나는 불확실성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 정당을 바꾸게 만든다. 투표 양상이 바뀌면, 정당은 상황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다투어 정책 의제를 만든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정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패턴 변화, 인구동태학적 변화, 정치와 첨단 기술의 접목, 사회정치적 변화 등이 정당에게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 [질문]

1. 정당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주요 경제, 기술, 사회정치적 동향은 무엇인가?
2.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들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3. 정당들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또는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하는가?

## G-20 의 무질서 대응

세션: 세션 4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5월 1일 / 9:00-10:15

사회: 데이빗 쇼어, 스탠리재단

패널: 안호영, 외교부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주리취안, 베이징외교원

### 패널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 때문에 21세기는 과연 해체(disintegration)와 무질서로 규정될 지, 새로운 국제 사회 계약과 규율로 규정될 지 질문하게 된다. G20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과 집단적 노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정상급 포럼인 G20는 최근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G20의 회원국 구성을 보면 국제 무대에서 각국의 힘과 영향력이 크게 변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 협력 체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상호 협력이 더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G20의 구성은 다자협력체제의 혁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다자협력체제에서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경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한다. 그러나, 출범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G20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질문]

1. G-20는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 중요성도 점점 퇴색될 위험이 있는가?
2. 금융위기상황에서 G20가 수행한 역할과 지금 수행해야 할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가?
3. G-20는 국가간 - 특히 신흥국이나 강대국간의 - 공조 가능성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보는가?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강대국들간의 공조에 대해 낙관하게 되는가?

##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개혁

세션: 플래너리 세션 III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5월 1일 / 10:30-11:45

사회: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즈

패널: 박태호, 외교부

권구훈, 골드만삭스

기 소르망, 맨해튼연구소

양바오원, 베이징대학교

### 패널 개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까?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체제는 세계 2 차 대전 직후에 미국과 주요 경제대국이 주도하여 국제통화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결과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 모델이 탄생하였고, 이 모델은 지난 반 세기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십억의 세계 인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전후에 도출되었던 컨센서스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의 시대에 리더들은 경제적 불안정성, 유로존의 개혁 실패, 취약한 글로벌 금융체제 등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질문]

1. 기존 자본주의 모델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2.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통합 과정은 계속될까?
3.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내 및 국제 제도적 개혁은 어떤 것들이며 이런 개혁은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 동아시아의 불안 요소

세션: 세션 5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5월 1일 / 14:00-15:15

사회: 앤서니 넬슨, 미-아세안 경제협력위원회

패널: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황웨이보, 대만국립정치대학

런샤오, 푸단대학교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방위대학교

### 패널 개요

언론은 주로 중국과 일본의 분쟁 위험이나 북한의 위협에 주목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미얀마의 수많은 소수민족 저항 세력이나 태국 및 필리핀의 이슬람 저항 세력 등 동남아시아에는 반군과 내부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방위비 지출이나 군현대화는 항상 민감한 이슈다. 중국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군선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패널에서는 향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과 역내 불안정 요소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 [질문]

1. 동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어디인가?
2. 이 지역에 추진되는 군현대화의 동기, 정당성,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3. 오판 또는 분쟁 격화의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영유권 분쟁과 해양안보

세션: 세션 5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5월 1일 / 14:00-15:15

사회: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패널: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알렌 롬버그, 스티븐센터

쑤하오, 중국외교학원

쩐 쑤잉 투이, 베트남외교아카데미

### 패널 개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관련 국가 정부들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해상교통로(SLOC)의 보호 차원에서 해양안보는 모든 국가의 국익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해양안보의 전략적 중요성, 자원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섬의 영유권 분쟁 문제들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관련국들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 패널에서는 주요 분쟁 현황과 해상교통로 보호의 최대 취약점을 살펴보고, 분쟁 관리라는 맥락에서 현실성 있는 해양안보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질문]

1. 단기적으로 분쟁 해역의 영유권 분쟁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
2. 해저에서 원유 나 가스가 발굴되면 이 사태에 미칠 영향은?
3. 조업 선박, 해양 경비대 및 해군의 충돌을 막으려면 분쟁 대상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기타 영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중국과 아세안(ASEAN)

세션: 세션 5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5월 1일 / 14:00-15:15

사회: 그리어 미즐, 윌슨센터  
패널: 사투 리마예, 동서문화센터  
리우린, 군사과학연구원  
프란체스코 만치니, 국제평화연구소  
응웬 호양 선, 베트남외교아카데미  
리잘 수크마, 자카르타 전략국제연구소

### 패널 개요

중국과 아세안은 그 동안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면서도 탄탄한 경제 관계 덕분에 양측 다 큰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영토 분쟁과 함께 중국이 갈수록 이 지역에 공격적으로 경제 및 외교적 진출을 하면서 현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 (pivot)을 이동하자 아세안 국가들은 두 개의 초강대국 중 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중국-아세안 관계가 벌써 복잡해지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를 중국의 세력권 (sphere of influence)의 일부로 인식한다.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이 패널에서는 중국의 동남아에 대해 장기적으로 갖는 야심과 이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중-아세안 관계를 이해하려면 양측의 시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질문]

1. 대중 관계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가?
2. 만약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게 되면 아세안은 집단 기구로서 존속될 수 있을까?
3.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에 대해 갖는 상반되는 시각과 이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난민 사태와 주변국가의 역할

세션: 세션 6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5월 1일 / 15:30-16:45

사회: 루시 윌리엄슨, 영국공영방송(BBC)

패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청샤오허, 중국인민대학교  
닉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미야케 쿠니,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 패널 개요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2,300만 명의 북한 주민은 영양 실조 상태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 유민이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 주민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UN, 미국과 한국이 해결해야 할 것이나 중국도 분명 역할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서 보았다시피, 한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은 무척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한 주민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연고가 있는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사태에 대하여 우려한다. 이 두 가지, 즉 북한의 국가 붕괴와 대규모 난민 발생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도 도시간, 지방간 대거 이동할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사상 최대 규모의 유민 정착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설사 평화롭게 붕괴된다 해도 불가피한 대량 난민 사태에 대하여 주변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질문]

1.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궁하는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들은 북한 주민의 이동과 난민의 유입 사태도 상정하고 있는가?
2.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각국이 갖고 있는 시각, 정책,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동남아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동질성

세션: 세션 6 / 그랜드 볼룸 I  
일시: 2013년 5월 1일 / 15:30-16:45

사회: 데이비드 찬스, 톰슨로이터  
패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시트 리마예, 동서문화센터  
토킨운, 폐낭연구소  
크리스토퍼 워커, 전미민주주의기금

### 패널 개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민주화는 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서 흔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체제도 아닌” 국가로 묘사된다. 필리핀 역시 흥미롭다. 민주주의 전통은 길지만, 거버넌스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미얀마의 정치적 민주화가 전문가들에게는 의외의 사건이었다. 이번 패널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현황과 미래를 짚어본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를 - 특히 동남아시아를 -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담론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질문]

1. 동남아시아 각국은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2.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신생 민주주의는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가?
3. 미얀마의 예기치 못한 정치적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리더십 부재

세션: 세션 6 / 그랜드 볼룸 III

일시: 2013년 5월 1일 / 15:30-16:45

사회: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패널: 크리스티안 버거, 유럽대외관계청

엘 할라와니 모함메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엘렌 레입슨, 스티븐센터

### 패널 개요

“아랍의 봄”이 시작된 2년 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리더십 공백상태다. 이 지역의 국내외적인 전통 세력들이 쇠퇴하고 있다. 10년 동안 걸프지역에 개입하고 정부 수립을 지원했던 미국은 이제 지쳐서 철수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주요 강대국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는 무하마드 모르시 대통령과 이슬람 정치지도자들이 집권한 후 정치 마비 상태가 되었다.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시리아 내전에서 깊숙이 개입한 후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란은 한편으로는 핵 프로그램 때문에 이스라엘과 서방과 대치하면서 동시에 역내 시아파들을 후원하느라 버겁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일관된 지역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조하게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다. 중동이 당면한 정치, 경제, 안보 및 환경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을 이끌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

### [질문]

1. 무엇이 이 지역의 리더십 공백을 채울 수 있나? 어떤 인물이 나서서 이 지역 상황을 주도하게 될까?
2. 리더십 공백을 채울 주체는 급부상한 정치적 이슬람주의자들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거론하면서도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아랍의 폭도”(Arab street)들일까?
3. 혹시 카타르의 왕이 공백을 채우게 될까? 리비아 내전에서 야심차게 개입하고 시리아의 반군을 지원한 시크 알 타니(Sheikh Al Thani)가 이 지역의 집단이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까?

##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세션: 플레너리 세션 IV / 리젠시 룸

일시: 2013년 5월 1일 / 17:00-18:15

사회: 사이먼 룡, 이코노미스트

패널: 모리스 피오리나, 스탠포드대학교

칼 거쉬만, 전미민주주의기금

유콘황,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찰스 쿵찬, 조지타운대학교

이근, 서울대학교

### 패널 개요

최근 미국에서 끝없이 진행되는 국가 부채한도(debt ceiling), 재정절벽(fiscal cliff), 예산자동삭감제도(sequestration) 등을 둘러싼 정쟁을 지켜보노라면 핵심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무능을 한탄하게 된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유럽연합의 미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유로존 위기는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방 선진국들이 이렇듯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일부 나라들은 민주주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갈수록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낸 중국 정책담당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과 중국 스타일의 거버넌스를 옳다고 굳게 믿는다. 이 때문에 서방이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한 원인이 민주주의와 까다로운 민주적 정책 입안 때문인가라는 이슈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질문]

1.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정치적 제도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저해하는가?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가 있는가?
3. 비민주적 정치 체제하에 경제를 발전시킨 국가들의 강한 위기 회복력(resilience)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